



## 인재지역할당제

-예산 없이 지방과 지방대를 살리는 한 방안-

김 윤 상 |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서울 내지 수도권에 비해 다른 지역의 사정이 열악하다는 점에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지방과 지방대를 살려야 한다는 데 있어서도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자 급년 초 정부 각 부처에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내용에 지방발전을 위한 묘안을 포함시키려고 고생을 했다는 말도 들린다. 작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대육성대책위원회(위원장 경북대 박찬석 총장)를 구성하여 위원회 회의 5회, 실무추진반 회의 9회, 권역별 세미나 4회, 공청회 1회를 거쳐 2000년 12월 육성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이와 별도로 지방 대학 총장들은 급년 5월 21일 대전에서 모임을 가지고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특별위원회(위원장 윤덕홍 대구대 총장)와 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오재일 전남대 교수)를 구성하였다.

글을 시작하면서, 이 글의 주제인 인재지역할당제를 주창한 경북대 박찬석 총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본다.

"서울 공화국은 지방의 인재와 돈을 삼키는 공룡이다. 지방은 서울의 하청업체 노릇을 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엘리트들이 지방의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돈과 우수인력이 모두 서울로 간다. 우리 인구의 60%가 지방에 사는 데 한쪽으로만 몰리다 보니 서울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이 든다. 급년도 대구의 경우에, 수능시험을 본 학생 2만명 중 7천 명이 서울로 갔다. 성적이 좋거나 경제력이 있는 학생은 대부분 상경했다고 보면 된다. 해마다 전국에서 고교 졸업자 5만 명과 편입생 등 모두 6만 명이 서울로 간다. 이에 따른 비용은 등록금, 하숙비 등 한 명당 연간 1천5백60만 원에 달한다. 고교 졸업자가 직장을 잡기까지는 평균 6년이 걸리므로 이를 포함할 경우 5조 6천억 원이란 돈이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셈이다. 정부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두뇌한국(BK)21' 사업을 시작한 뒤 지방대에 일부 남아 있던 우수 인력마저 장학금을 주고 생활비를 대주는 서울의 대학원으로 가버렸다. 교수가 연구를 하고 싶어도 도와줄 대학원생이 없어 하는 수 없이 경북대는 올해 베트남 학생과 중국 하얼빈대학 학생들을 뽑아 연구 인력을 충원했다."

### I. 서울 집중 문제의 세 측면

서울 집중의 문제는 권력 집중, 산업·문화시설

집중, 인재 집중을 포함한다. 세 가지 집중 문제는 서로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되는 악순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중 어느 한 가지를 분산시키는 조치는 다른 집중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첫째로 권력 분산이다.

서울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 주도 사회에서 강력한 권력이 서울에 소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거나 권력의 소재를 서울 밖의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권력을 지방에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권력의 소재지를 이동하는 방법은 새로 이동한 곳에 인구 산업의 새로운 집중 현상이 생길 것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중앙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조치는 서울 중심주의 문제와 관계 없이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불필요한 정부 규제부터 줄이고 전반적으로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권력의 지방 분산도 필요하고 또 서울 지방 격차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어느 정도의 권력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구를 유인하는 산업과 문화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기존의 산업 및 문화시설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취업 기회, 소득 기회, 문화 향유 기회를 지방에 골고루 분포시킨다는 점에서 이것도 근본적인 해법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들의 입지는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자연 환경, 사회간접시설, 권력, 정부, 노동력, 시장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속변수인 측면이 강하다. 문제 해결 대책을 강구하면서 종속변수를 정책 수단으로 하는 것은 원칙에도 어긋나고 효과도 적다. 독립변수를 그냥 두고 종속변수만을 조작한다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능률을 저

해하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 하나의 대안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 특히 유능한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막는 대책이다. 인구도 일반적으로 취업 및 출세 기회가 많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산업 문화시설의 입지와 마찬가지로 종속변수적 성격이 짙다.

그러나 사람이 지방에 거주해도 취업 및 출세의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굳이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을 것이고 취업 및 출세의 기회는 인재 충원제도를 통해 다소간 고르게 분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재 충원제도가 서울 지방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인재지역할당제는 인재 분산의 한 방법이다. 지금과 같은 서울중심주의 속에서 권력과 중요시설을 분산시키는 것은 인재지역할당제를 성사시키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더 어렵고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에 인재지역할당제는 한 푼의 예산도 들지 않으면서 효과는 큰 방법이다.

## Ⅱ. 지방 거주자에 대한 차별

필자는 국내 대학간 대학교수 교류 신청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간 적이 있다. 이 교류 제도는, 연구 환경이 좋지 않은 대학의 교수들이 1년간 국내의 다른 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당연히 지방대학 교수의 신청이 많아 전체의 6분의 5를 차지하였다.

이 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 나라 중앙정부, 중앙기관의 거의 모든 위원회는 서울 사람으로 채워져 있고 또 회의도 당연히 서울에서 한다. 중앙부처의 직업공무원이 서울 사람인 것은 이해가 된

“

인재지역할당제는 인재 분산의 한 방법이다.  
지금과 같은 서울중심주의 속에서 권력과 중요시설을 분산시키는 것은  
인재지역할당제를 성사시키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더 어렵고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에 인재지역할당제는 한 푼의 예산도 들지 않으면서  
효과는 큰 방법이다.

”

다. 직장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견 수렴 내지 전문지식 활용을 위해 때때로 개최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대부분 서울 사람으로 채우고 그 회의를 서울에서만 개최하는 것은 곤란하다.

모든 일이 이런 식이다. 대통령 선거의 후보도 거의 서울 사람이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정부의 요직인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 안기부장 등도 모두 서울 사람이다. 이 때 서울 사람이란 활동 무대가 서울인 사람, 베개를 서울(내지 수도권)에 두는 사람, (선거 득표와 무관한 경우라면) 낙동강이나 영산강의 오염보다 한강 오염에 더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마저도 실은 대부분 서울 사람이다.

대학 졸업자의 취업에서도 지방대 졸업자는 곤란을 겪는다. 우선 주요 기업의 사원채용 부서가 서울에 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 조금 사정이 낫다고는 하나 정보의 편중 현상은 아직도 심각하다. 특히 주요 기업이 대규모 공개채용 대신 소규모 인원을 비공개로 채용할 경우에는 서울 소재 대학에서 사람을 구하게 된다. 또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지방대 졸업자 내지 지방 거주자는 원서를 구하는 데서부터 힘이 든다.

### Ⅲ. 서울 사람들의 거부 반응

박찬석 총장이 주창한 인재지역할당제는 그 중에서 국가고시 합격자를 지역 인구비례로 배정함으로써 지방대학에 다녀도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에 인재를 유치하자는 제도이다. 국가고시 합격을 심지어 가문의 영광이라고까지 생각해 온 우리 나라 풍토에서 이 제도는 지방대를 살리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몇 년간 발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적주의 정서가 뿌리깊은 우리 사회에서, 이 제도가 실시될 때 실력 있는 수도권의 응시자가 불합격하고 그보다 성적이 뒤지는 지방의 응시자가 합격하는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든지 합격자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염려도 작용을 하였겠지만 더 큰 원인은 이 법안 통과에 힘을 써야 할 국회의원이 실은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명분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추진에 열의를 내지 않는 데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인재지역할당제를 놓고 서울 사람과 서울 바깥 사람 간의 견해차는 많다. 경북대에서는 인재지역

〈표 1〉 인재지역활당제 설문 결과

		전국	서울	인천, 경기
광역의원	회신율	61.6%	11.1%	40.9%
	지지율	95.2%	87.5%	94.3%
4년제 대학총장	회신율	64.4%	41.3%	50.0%
	지지율	94.6%	73.3%	90.9%

활당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연전에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원 전원과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 조사에서 나온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광역의원에 관해 보면 인재지역활당제에 대한 지지도는 적극 찬성 및 찬성에 응답한 광역의원이 90%를 상회할 정도로 높다. 그러나 서울 광역의원의 설문 회신율이, 전국 평균이 61.6%인데 비해, 11.1%로 매우 낮다는 점을 볼 때 서울의 광역의원은 이 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회신한 의원 중에서도 지지도가 다른 지역보다 다소 낮았다. 인재지역활당제가 실시될 경우 인재 선발에 관한 서울 사람의 기득권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경기권 광역의원도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회신율과 지지도가 낮았다. 경기권은 서울의 생활권으로서 서울과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공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 앞서 같은 설문지로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표에서 보듯이 두 조사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설문에 대한 회신율과 지지율에서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총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았지만 광역의원의 경우만큼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광역의원은 인재 선발에 있어 지역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서울지역 주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반면 대학 총장은 지방대학의 어려운 사정을 좀더 이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서울 사람은 인재지역활당제를 싫어하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인재지역활당제 법안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데 기인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국회의원 대다수의 득표기반이 지방이므로 인재지역활당제의 취지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자신이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이 제도를 지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 Ⅳ. 여성채용목표제와 닮은 꼴

인재지역활당제는 돈 안 들고 서울과 비서울 간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적지 않다. 특히 서울의 고득점자가 불합격하는 반면 대구의 저득점자가 합격할 수 있으므로 거꾸로 서울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는 점에서 불평등 시비가 많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러나 역(逆)차별적인 제도가 모두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서 불평등한 정도와 제도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으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또 합격자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실적주의 정서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반대 이유가 된다.

인재지역활당제는 여성채용목표제와 닮은 꼴이다. 여성채용목표제는 1996년부터 5급, 7급,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여성채용 목표율을 미리 정한 뒤 이 범위 내에서 합격선보다 성적이 낮은 여성을 남성과 별도로 정원 외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대상 시험은 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 7급·9급 공채시험 중 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은 제외—이며 여성을 채용하는 목표비율은, 2001년에 5, 7, 9급이 각각 20%, 23%, 25%이고 2002년에는 각각

“

대졸자의 진로에서 지역간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대학에 유능한 학생을 유치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인재가 계속 머물러 살면서 지방에 기여하도록 하려면  
지방에 거주하더라도 불이익이 없게 해주어야 한다.

”

20%, 25%, 30% 등이다. 일단 모집 정원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 다음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에는 5급의 경우는 정원내 합격선보다 3점, 7급과 9급의 경우는 5점 이하까지의 여성 불합격자를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이처럼 여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여성 지원자의 성적이 다소 모자라더라도 합격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남성 응시자를 역차별한다든가 합격자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등 인재지역할당제와 꼭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헌법상 평등에 위배된다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필자가 보기로 두 제도의 차이점이라면, 인재지역할당제는 지방대생이 덕을 보는 반면 여성채용목표제는 주로 서울 소재 대학의 여학생이 덕을 본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평등 문제를 둘러싼 위헌 시비에도 서울 사람의 편견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스럽다.

여성채용목표제는 제도에 대한 위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몇 가지 보완조치를 두고 있다. 우선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 두었고, 점수 낮은 여성을 합격시킬 때 정원 외로 뽑도록 하여 남성 응시자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명분을 두었고, 여성 합격선이 무한정 낮아지지 않도록 점수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이런 보완 조치는, 말하자면 화장술이다. 한시적 제도라고 하지만 이를 계

속 연장해 가고 있으며, 금년도에 정원 외로 뽑는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한 이치이며, 합격점이 너무 낮아지지 않게 제한한다고 해서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장술 덕에 덜 마위 보여서 위헌 시비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반면 7, 9급 공무원 공채시험 등에서 군제대자에 대해 5점 내지 3점의 가산점을 주는 소위 군가산점제는 위헌판결을 받았다. 군복무자나 국가유공자에 혜택을 부여하지는 데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터인데도 위헌판결을 받은 이유는 결과적으로 군제대자가 합격을 거의 독점한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7,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합격점이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불과 영점 몇 점 차로 합격 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에서 제대 군인에 대하여 시험과목별로 3점 또는 5점을 가산하는 것은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경우에 따라 만점을 받고도 불합격되는 모순이 있을 수 있으며 결국 이들의 응시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표현이 있다. 군가산점제도 여성채용목표제와 같은 보완조치를 두었다면 위헌판결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재지역할당제를 정책화함에 있어서 정면 돌파보다 이러한 보완조치를 차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채용목표제와 같은 방법도 좋고, 다음과 같은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선발 인원의 반은 종전대로 뽑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만 지역할당제를 적용하는 방법. 둘째로, 선발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사람의 점수를 낙제선으로 정하고 그 이하 득점자는 무조건 불합격으로 하는 방법. 셋째로, 이 제도를 법제화한 후 몇 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거나 조금씩 할당비율을 높여감으로써 그 동안 국가고시를 원하는 우수한 인제가 지역별로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방법.

## V. 인재지역할당제의 확대 적용

인재지역할당제를 넓게 보면, 지방에 사는 사람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 살건 국가적 인재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하는 모든 제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인재지역할당제에 해당하는 각종 방안을 생각해 보자.

우선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에서 지역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대학생 중 국가고시를 희망하는 학생수보다는 대기업에 입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국가고시에 한정된 지역할당제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규제를 줄이는 추세에서 이런 조치를 강권할 수는 없지만 설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만일 대기업이 인재지역할당제로 인해 실력이 부족한 사원을 뽑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면 최소한 채용시에 학벌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실력에 의해서만 선발하도록은 해야 한다. 학벌에 따라 사원 채용에서 차별을 두는 것이 옳지 않다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이런 정도는 대부분의 기업이 어렵지 않게 양해를 할 것이다. 학벌이 작용하

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용서류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도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해 각종 이력서에 본적란을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방법에 큰 저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졸자의 진로에서 지역간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대학에 유능한 학생을 유치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인제가 계속 머물러 살면서 지방에 기여하도록 하려면 지방에 거주하더라도 불이익이 없게 해주어야 한다.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방법은 장관을 임명할 때 출신지 이외에 거주지를 배려하는 방법이다. 현재는 언론이 모두 서울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서울 사람 중에서 장관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거주 지역이 아니라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안배가 되었는가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도한다. 그러다 보니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출신 지역에만 신경을 쓴다. 그 결과 지금까지 지방 거주자가 장관이 된 예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각 때마다 거주 지역이 지방인 사람이 새 장관의 반이 되도록 배려한다면 매우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인 여론 수렴 내지 전문가 의견을 모으기 위해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에 지방 거주 위원의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두는 자체가 이미 거주장스려운데 안면도 없고 정서도 공유하지 못하는 지방 사람까지 위원으로 대폭 넣어 놓으면 더욱 일이 복잡해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때로는 지방 사람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배제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현재 각종 위원회의 지방 거주자 참여 비율은 극히 낮다. 그러나 지방 사람을 끼워 넣지 않으면 지방 사람의 의견은 아예 배제되어, '중앙' 정부가 아니라 서울지역 정부가 전국을 다스리는 꼴이 되

“

우리 나라와 같은 서울 중심, 학벌 중심 사회에서는,  
 자녀를 서울에서 키우거나 아니면 적어도  
 대학만은 서울에 소재하는 일류 대학에 보내려고 한다.  
 그 때문에 능력 있는 부모, 우수한 가정이 서울에 몰린다.

”

고 만다.

또 위원회 등의 회의도 서울에서만 개최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 주관부서가 서울에 있으니 부득이 서울에서 한다고 하면 결국 지방거주 위원을 차별하는 결과가 되고 또 지방거주 위원의 참석률을 낮추게 된다. 지원하는 부서의 편의에 맞추어 회의 장소를 정하는 것이 옳은지 회의 참석자를 기준으로 장소를 정하는 것이 옳은지는 자명하다. 부득이 회의 장소를 서울 위주로 한다면 회의비 지급액에서는 서울위원과 지방위원 간에 큰 차이를 두어야 한다. 두 시간짜리 회의를 위해 서울위원이 4시간 정도 소비한다면 지방위원은 평균 10시간 정도 소비하므로 회의를 위해 바친 시간의 기회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측면은 교육 특히 대학입시이다. 우리 나라와 같은 서울 중심, 학벌 중심 사회에서는, 자녀를 서울에서 키우거나 아니면 적어도 대학만은 서울에 소재하는 일류 대학에 보내려고 한다. 그 때문에 능력 있는 부모, 우수한 가정이 서울에 몰린다. 또 대학입시 때문에 중등교육이 왜곡된다. 교육개혁을 어떻게 하든, 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이 어떻게 바뀌든, 대학이 어떤 선발방법을 쓰든 그에 맞추어 과외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쓸데없는 공부를 하느라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서울의 일류 대학 특히 서울대에서 신입생 지

역할당제를 사용한다면 우수한 인구의 서울 집중은 많이 완화될 것이다. 현재 서울대가 사용하고 있는 교장추천제도 지역할당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여도 좋다.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에서도 다른 학교보다 서울대에 학생을 많이 보내려고 무리한 경쟁을 하지 않게 되어 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VI. 맺는 말

지금까지 인재지역할당제가 필요성, 이 제도가 불평등하다는 반대 논거에 대한 반론,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필자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시행에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우리 나라 정책 결정자는 모두 서울 사람인데 서울 사람은 이 제도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서울 사람의 이기심을 꺾기 위해서는 이를 정치적이슈로, 특히 선거에서의 정치적 이슈로 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머리로 지지하는 제도를 정서가 못 받아들인다면 득표라는 이해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또 하나의 큰 장애는 지방 사람의 고정관념이다. 지방 사람 중에서도 인재지역할당제는 불평등한 제

도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설문조사에서 지방의 광역의회 의원과 지방대 총장은 대부분 이 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지방 사람은 광역의원이나 대학총장만큼 이런 문제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반대자가 좀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방 사람 중 반대자는, 자녀가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든 국가시험을 보든 별 걱정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거나, 비록 지방이 손해를 보더라도 경쟁 시험은 반드시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깐깐한 원칙론자일 것이다. 이런 원칙론자는 한편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지방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재 지역할당제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기도 하다. 더구나 지방 사람 중 반대자는 대체로 지방의 여론주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다. 비중 있는 지방 사람 중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다면 서울 사람은 이 점을 이용하여 제도 실현을 지연시키는 명분을 삼을 수도 있다.

서울 사람이든 지방 사람이든 인재지역할당제에 반대하는 분들은 지방문제의 심각성이 보통의 대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여성채용목표제의 문제와 인재지역할당제의 문제는 닭은꼬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여 제도가 실현되도록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인재지역할당제라는 용어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 이 용어를 접하는 일반 사람은 '할당'이라는 단어에서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제도라는 느낌을 받기 쉽다. 여성채용목표제도 여성채용할당제라고 했으면 더 거부반응이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인재지역할당제는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취업과 출세와 정책결정에 고루 기회를 가지도록 하지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할당을 균형으로 바꾸어 인재지역균형제로 부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또 하나의 대안은 여성채용목표제에 대응시키기 위해 지역인재채용목표제라고 불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윤상**

#### 김윤상

서울대 법과대학, 환경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도시계획학)를 받았으며 현재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토지정책론」, 「진보와 빈곤」(역), 「도시모형론」 등이 있다.

